

“이미 최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법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

✎ 성지은 기자 (울산본부) | © 승인 2023.04.18 16:27

노동시간 개악안 노동자 건강권·생명권 훼손
포괄 근무제 연동, 수당 지급 차질 야기해



4월 18일 오후 2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의견발표 및 제안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다.



4월 18일 오후 2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의견발표 및 제안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8일 오후 2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의견발표 및 제안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및 선택 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 69시간 장시간 집중 노동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 확대법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근절,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4월 18일 오후 2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의견발표 및 제안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다. 박준석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은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준석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상황에 노동시간을 더 늘려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수많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더 확대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환경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나눠서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야만 모두가 다 같이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라며 노동시간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4월 18일 오후 2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의견발표 및 제안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박지현 변호사 법률 전문가 의견 발언하고 있다.

이어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박지현 변호사는 “2021년 대한민국 노동 시간은 1967시간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건강권 생명권을 훼손하게 되는 과로사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규모 비조직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를 도입할 경우,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나 근로자 대표 교섭력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노동 조건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포괄 근무제와 연동되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행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했다.



4월 18일 오후 2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의견발표 및 제안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다.



4월 18일 오후 2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의견발표 및 제안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회계투명성, 건설현장 비리를 명분으로 노동부가 추진해온 반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성지은 기자 (울산본부) minjuulsan@gmail.com